



현대인과 개혁신앙 ②

사교육과 그리스도인

21세기 한국사회의 난제중 하나는 사교육문제이다.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에 직결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 문제

이다.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정상적 기능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교육을 고비용 저효율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사교육은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사회계층이동을 둔화시켜버렸고,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인력 배분을 불균형상태로 내몰았으며, 낭비적인 해외유학을 확산시켜 가정경제 및 가족상호관계를 위기 가운데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사교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활동이 교회청소년들의 주일 교회 신앙 활동을 위축시킨 주범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구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일은 기독교인 부모들과 기독교교육관계자들의 주요한 과제이다. 짧은 글이지만 사교육의 기초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비된 용어이다. 공교육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학교교육을 의미하므로 사교육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학교교육 외에, 개인과 단체 혹은 사기업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공교육은 근대국가의 유산이다. 18-19세기에 근대국가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서양

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주도의 공교육이 없었다. 근대국가 이전까지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회였고, 사실상 교육의 기회는 일반적인 경우 귀족 및 중산층 자녀들의 특권이였다.

근대국가가 확립된 이후, 교육은 국가의 주도의 활동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는 모국어와 국사교육을 통해 국가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강화함으로써 전국민을 단합시키고 그 단합된 힘을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육을 이전처럼 사적인 영역에 맡겨둘 수 없었다. 국가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법을 통해 공립학교 제도를 확립하여 정통성을 독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부터 있어온 사교육활동은 억압받았다. 공교육의 기반이었던 초등학교교육은 국민전체의 의무 보편 교육이 되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공교육은 특별히 평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대국가에서 사교육은 억압받으면서도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들은 국가가 학교교육을 독점하여 근대적 세계관만을 형성하는 일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고, 국가도 학교 전체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과 전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사립학교를 허용하면서 그 대신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동안 사립학교들은 종교와 특정 세계관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근대 및 현대국가에서 교육의 자유라는 가치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양에서는 사교육이란 공립학교가 가지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판하고 특정 공동체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했던 사립학교교육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그 의미가 서양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대국가시대부터 학교를 인재의 관직등용을 위한 통로로 간주하였고, 그 필요를 위해 처음부터 국가가 설립하였다. 사립 교육기관들이 존재하였지만 국가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교육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 학교교육의 기회는 오직 한정된 관직에 이를 수 있는 양반자녀들의 특권이었다. 양반가의 자녀들은 과거시험의 합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국가가 임명한 학교교사 외에도 종종 유능한 교사들을 통해 과외교육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 의무교육으로서의 근대 학교교육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제한적으로 실행되었고, 해방이후에야 확립되었다. 조선 말기까지 국가가 교육을 주도한 전통,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본 정권이 모든 것을 통제하 관례에 따라 해방이후 확립된 권위주의 국가가 학교교육을 주도하였다. 구한말 이후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일제 말기에 교육의 자유를 거의 상실하였고 거의 공립학교와 같은 기관이 되어버렸다. 해방이후 사립학교들이 다시 설립 되었지만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그 사립학교들은 서양의 경우처럼 종교 및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우리 상황에서 사교육이라는 표현은 사립학교교육을 의미하는 용어가 될 수 없었다. 그 대신 사교육은 제한된 성공에 이르는 통로인 국가주도의 학교교육에서 선발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적 학교교육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학교교육내용에 대한 반복교육의 과외 학습을 뜻했다. 학교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일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일에 유리한, 선별된 상급학교 진학의 필수조건이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미 확보한 눈치 빠른 부모들은 처음부터 사적인 거래를 통해 현직교사 및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자녀들에게 개인과외교육을 시켰다.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으로 자녀교육투자가 가능해진 부모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육경쟁은 치열해졌다. 핵심교과학습을 중심한 과외교육은 개인 교사 고용의 차원을 넘어 점차 학원사업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 말 거의 전 국민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이르자 학교 교육은 전국적인 학습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교육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에 더 앞서 해당내용을 교육하는 선행학습이 중요해졌다. 선행학습 내지 재학습의 정도가 심화되고 범위가 확대될수록 사교육의 경제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학습이 뒤처질 경우 그 상태를 뒤집기고 앞서기란 어려웠으므로 유학을 통해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중산층부모조차 사교육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고, 사교육을 사회 문제화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교육활동은 학생과 부모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전투행위가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내용에 대한 선행학습 혹은 재학습을 실행하는 과외교육을 뜻하며, 사교육문제는 병적인 경쟁과 비용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고 있다.

사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사교육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서양사회에서 사교육은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특히 사립학교교육은 공립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었다. 학교교육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획일화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인 본주의 세계관에 따라 국가가 해당집단의 세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근대국가의 획일적 이데올로기 주입과 국민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던 교육은 결국 제국주의 정복의 야심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온 과외교육의 사교육도 제한된 의미에서 학습자체의 관점으로 볼 때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의 내용이 학생 개인에게 유의미한 지식이 되려면 충분한 이해와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과 심화와 범위확대와 구체적 적용은 효율적인 학습의 조건이다. 예습을 의미하는 선행학습은 학교학습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복습을 의미하는 재학습은 이해를 확인하고 내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풀이를 통한 범위확대와 구체적 적용은 이미 얻은 지식의 효용성과 적용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학습의 한계를 과외의 사교육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내지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학생 개인의 수준과 문제를 진단하고, 학습문제를 해결하며, 개선시켜주는 좋은 방법이다. 근대 공교육이 방법에 있어 집단학습을 의미한다면 이전부터 사교육은 개인 내지 소그룹 학습이었다. 교육방법의 효과에 있어 집단학습은 개인 내지 소그룹 학습을 능가하기 어렵다. 학습의 반복과 양의 확대, 개인 맞춤형 진단과 문제해결을 핵심활동으로 삼는 사교육은 성적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일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육학적인 연구 없이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온 결과들이지만, 교육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은 사교육과 성적향상, 사교육 지원의 가능성을 뜻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명문학교진학의 상관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학습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 사회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교육이 학습열망을 채워주고 부족한 학습을 채워주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사교육의 주요한 동기가 경쟁사회안에서 생존과 번성의 본능, 안정과 풍요의 열망과 욕심, 자기성취와 위대화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자녀들이 학습경

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의도하고,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적어도 자녀들이 그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사교육논리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켰으므로 사교육의 결과는 자본주의사회의 이상적 직업에 학생들이 몰려들게 했다.

사교육의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과중한 학습으로 학생을 학대하는 데 있다. 사교육이 초래하는 기본인권에 대한 학대문제에 관대한 것은 한국사회가 과로를 부추기고 인권의식이 부족한 자본주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노동,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그들에게 아동기와 청년기의 발달과정은 단지 미래를 위한 비장한 준비를 의미할 뿐, 더 이상 행복한 삶이 아니다. 탐욕과 경쟁은 학생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한계수준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로가 미래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러한 과로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속이지만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평생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교육대상자 모두가 열망하는 것과 달리 단연코 미래에 희망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비윤리적이다. 학교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정도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선행학습이라면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선행학습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된다면 선행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본래의 정당한 절차는 생략되거나 그 학생들이 무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흥미가 없어져버린 수업분위기는 산만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 현상은 사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이 학교수업에서 수업목표와 절차에 따라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학교교육은 민주사회에 적합한 전

인교육의 장이 아니라 지식학습의 장으로 변하고 만다.

사교육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교육 투자의 여유가 학교성적 및 대학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변수가 될 때 사회적 평등의 가치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이동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불안정은 커진다. 사교육투자가 확대되어 중산층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부모들의 자기 노후 준비가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초학습에 맞추어진 사교육은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인력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을 약화시켜 직업세계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게 만든다. 자녀들은 사교육 소비와 비현실적인 비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 일보다는 지속적인 사교육과 비생산적인 유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사교육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주일날도 진행되는 학원 사교육은 학생들의 주일예배 및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방학에도 진행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오늘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서의 위축현상은 사교육에 기인한 바 크다. 학교조차도 법적인 수업시간 외에 사교육성격의 수업을 강요하고, 주일조차도 강요하는 수업으로 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협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일에 쉬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교회활동에 많이 개입하는 것을 꺼린다. 기독교교육 관련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양의 경우처럼 신앙의 세대적 단절이 이루어지고 교회들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본다.

사교육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응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교육 과잉시대의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자본주의구도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은사와 재능의 개발, 소명의 성취를 위한 구비에 맞추어져 있다. 이 목표를 위한 교육의 의도라면 학습 성취를 위한 사교육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사교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사교육 만능주의자, 혹은 사교육 전도사와 찬양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 안에서 사교육에 기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실제로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사교육 기회이용은 상당히 불편하다. 주일과 방학의 신앙교육활동은 사교육의 흐름을 끊어놓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포기하고 그 관심을 사교육으로 옮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학습의 양이 부족하여 희망하는 대학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한해 더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할지언정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둘째, 사교육의 기회가 귀족과 상류계층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조건은 이 기회의 문을 닫는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으로 개인학습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에 의해 제공된다면 좋을 것이다. 국가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평등의 조건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교육에서 상류계층보다 하위계층의 조건개선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특목고에 투자하기보다 중하위계층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투자하여 그들

이 중상위계층 자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대복지국가는 경쟁의 가치에 몰입하기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의 가치를 높인다면 국가는 평등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사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하위계층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간섭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학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세금으로 상당부분 조정해주고, 하위계층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비전체, 그리고 전문대학 학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고, 국립 및 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소득비율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하위계층 자녀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법 개정을 지지할 수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사교육의 한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교육의 홍보와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자녀들은 사교육을 통해 동일한 목표에 도달되지 않는다. 인간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초교육에 집중된 사교육이 모두의 동일한 비전을 실현시켜줄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직업에만 집착하여 사교육을 통해 끝없이 그 성취를 추구하기보다 재능과 소명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서 능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절이 시민 됨의 교육이라는 평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등학교 이후는 재능과 은사에 따른 다양한 학교의 진학, 그리고 인문계 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이 옳다. 이러한 방향은 사교육의 필요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넷째,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 공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외의 시간에 강제하는 수업은 법

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법정 수업 외에는 전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와 선택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교사의 권리가 아니다. 동시에 사기업으로서의 학원이 심야수업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인권을 배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주일에는 학교의 공교육이건 학원의 사교육이건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이 성인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억제 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과로하는 사회, 과로를 강요하는 사회는 병적인 사회이다. 병적인 경쟁의 사회는 모두를 병들게 하고 모두에게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지우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구원과 복지를 위해 경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와 협력과 봉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사회 안에서 기본법적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이익 중심의 자본주의의, 길들여지지 않는 말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